

출 장 보 고 서

I. 출장개요

1. 출장자: 김규관(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
2. 출장기간: 2023년 12월 17일(일)~12월 21일(목)(4박 5일)
3. 출장지: 일본 도쿄
4. 출장목적: 수탁연구 과제, 「미래지향적 한일 산업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관련 현지 전문가 면담·인터뷰

II. 출장일정

일 자	행 선 지	활동사항	비 고
12월 17일(일)	서울 → 도쿄	• 이동(세종시→김포공항→도쿄)	OZ1045
12월 18일(월)	도쿄	• 대동문화대학 다카야스 유이치 교수 면담	
	〃	• 아시아대학 오쿠다 사토루 교수 면담	
12월 19일(화)	〃	• 아시아대학 쿠노 아라타 교수 면담	
	〃	• JETRO 와카마쓰 이사무 조사부장/모모토 카즈히로 비상근촉탁원 면담	
12월 20일(수)	〃	• 도쿄대학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이가타 아키라 교수 면담	
	〃	• JCER 이쥬인 아쓰시 상석연구원 면담	
12월 21일(목)	도쿄 → 김포	• 이동(도쿄→김포→세종), 12월 21일 도착	KE2102

Ⅲ. 활동내용(요약)

사전목적	성과 및 목적 달성내역	목적 달성도	비고
미래지향적 한·일 산업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일본 내 전문가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이후 일본기업의 對韓 직접투자 동향 파악 -한·일간 무역 현황과 활성화 방안 관련 인터뷰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일본의 대응 관련 인터뷰 -한국과 일본의 탈중국화, 디리스팅에 대한 공동 대응 관련 인터뷰 	100%	-

Ⅳ. 관찰 및 평가

- (한·일 간 산업협력: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 일본기업의 對韓 직접투자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나, 한국내 기업의 노사문제와 반일감정을 가장 큰 장벽으로 인식(대동문화대학 다카야스 유이치 교수)
 - 2022년 들어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수출규제 이전인 2018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으나 제조업-화학공업-반도체 소재기업에 편중되고 있음. (JETRO 와카마쓰 이사무 조사부장/모모모토 카즈히로 비상근촉탁원)
 -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BtoB, BtoC 모두 한일관계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한편, 한국 앵커기업(삼성, SK, LG 등)의 국내설비투자에 연동되는 경향도 강함
- (한·일 간 무역활성화 방안)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이 시도한 FTA 협상 중 유일하게 타결된 것은 RCEP인데, 무역자유화율이 낮지만 한일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RCEP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아시아 대학 오쿠다 사토루 교수)
 - 일본은 최근 중국의 경기감속과 미국의 중국 견제론을 배경으로 한국시장의 중요성에 대해 재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對韓 무역수지 흑자(GDP의 0.5%)의 기여도에 대해

재평가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과 한·일 협력) 일본은 신핵심기술(C&ETs)의 개발과 실용화에 뒤처지고 있어 한국을 포함한 유지국과의 공동개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서도 WTO, IPEF, RCEP 등 다자간 자유무역 틀 활용에 동의(도쿄대학 이가타 아키라 교수/아시아대학 쿠노 아라타 교수/JCER 이주인 아쓰시 상석연구원)
- 다만, 한·일 양자간 협력과 관련하여 일본은 對中 공급망 단절에 대한 대응보다는 첨단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공동대응에 관심이 더 많다는 인상을 받음.

V. 상세내역

1) 한·일 간 산업협력: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 면담자: 대동문화대학(大東文化大学, 다이토분카대학) 다카야스 유이치 (高安雄一) 교수

Q1. 제도적 측면에서 일본기업의 對韓 직접투자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A. 2003년 1월 발효된 한일투자협정은 내국민대우(NT), 최혜국대우(MFN), 이행요건 부과금지 네거티브리스트 등 제반측면에서 일본이 체결하고 있는 다른 EPA에 비교해 봐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Q2. 그렇다면 일본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對韓 직접투자의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 A. 현재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은 모두 진출했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일본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소재 등은 한국 진출이 가능하지만, 리튬이온 전지의 소재 등은 한국에 진출할 정도의 능력이 없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한국에 진출한 여지가 없다. 인터뷰 등에 의하면, 일본기업의 對韓 직접투자 장애요인으로서, 한국에서의 노사문제를 비롯한 노동자 관련 문제를 많이 거론한다. 또한 일본기업의 對韓 직접투자에서는 B to B 보다는 B to C가 저조한데, 이것은 한일관계가 악화하면 지난번 일본제품 불

매운동에서 경험한 바 와 같이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본다.

□ 면담자: JETRO 와카마쓰 이사무(若松勇) 조사부장/모모모토 카즈히로(百本和弘) 비상근촉탁원

Q1.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이후 일본기업의 對韓 직접투자 동향은 어떠한가?

A. 제조업 분야에서 대한 직접투자액은 2019년 이후 매년 5억 달러를 밑돌고 있다. 특히 2020년은 1억 5,700만 달러로 1997년(1억 2,231만 달러) 이후 가장 적었다. 2022년은 4억 4,955만 달러로 회복했지만, 2018년(4억 6,827만 달러)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회복세가 둔하다. 제조업 내역을 보면 2022년을 제외하고 화학공업이 가장 많아 제조업의 대한 직접투자의 주역이 되고 있다. 일본의 화학기업 투자 사례가 많은 것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으로부터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즉 고객인 한국 기업 근처에서 관련 소재를 제조·공급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생산 거점을 신·증설하는 움직임 때문이다. 2019년 이후 한국에 반도체 소재 관련 생산거점을 신·증설한 기업은 닛카화학, 도소퀴츠, 타이요홀딩스, 쇼와덴코머티리얼즈, 닛산화학, 스미토모 화학, 토쿠야마, ADEKA, 쇼와덴코, 후지필름, TOK 등이다. 특히 2023년 들어 ADEKA, 이데미츠코산, 닛산화학, 후지필름이 잇따라 한국에서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 거점을 새로 설립하거나 증설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고객기업 가까이에 R&D 거점을 정비하여 고객기업의 니즈를 파악하고 공동개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Q2. 2019년 이후 일본기업의 對韓 직접투자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첫째, BtoB, BtoC 모두 한일관계의 냉각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BtoB의 경우 한국 정부가 2019년 8월 발표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이 탈일본을 목표로 한 것이었던 만큼, 일본 기업으로서는 한국 기업에 대한 판매 강화를 위한 대한 직접 투자를 단행하기 어려웠던 가능성이 있다. BtoC 관련해서는 2019년 여름 이후 활발한 'No Japan' 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일본 기업은 한국 진출을 당연히 주저했을 것이다.

둘째, 제조업의 경우 한국기업의 설비투자 정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실질설비투자(수요 항목별 GDP 베이스), 실질 기계 수주액(선박 제외) 모두 2020년은 전년 대비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2018년 수준을 회복하는 정도에 그쳤다. 다만, 2022년은 3년 만에 10억 달러를 초과하였는데, 한일관계 개선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2) 한·일 협력: 무역

□ 면담자: 아시아대학(亜細亜大学) 오쿠다 사토루(奥田聡) 교수

Q1.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일본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고, 한일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비책은 무엇인가?

A. 한국의 전체 수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 20%를 넘었으나 2023년 현재는 7.5%까지 저하되었다. 그 배경에는 한국 기업의 자본·중간재의 국산화와 수입다변화(중국)가 큰 역할을 하였다. 지금까지 한일이 시도한 FTA 협상은 한일FTA, 한·일·중 FTA, RCEP 3가지인데, RCEP만이 유일하게 협상에 타결을 보았다. RCEP은 한국에게 유일한 對日 자유무역협정이고 일본에게는 對韓, 對中 자유무역협정이다. 다만 RCEP은 참여국의 경제발전단계 격차를 감안하여 개방수준이 낮은 게 사실이다. 한·일간 관세양허율은 품목 수 기준으로 한일 양국 모두 83%, 공업제품에서는 한국 91.7%, 일본 94.1%에 불과하고 개방품목이라하더라도 장기철폐품목이 많다. 10년 이상의 장기철폐품목 비율이 한국 41.6%, 일본 17.1%이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한일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RCEP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對日 수입 시 특혜대상율(RCEP 발효에 따른 추가적인 관세인하가 적용되는 품목 비율)은 13.8%, 일본의 對韓 수출 21.4%에 불과하지만 이마저도 활용율이 낮다. 한국측의 활용률은 65.9%인데 반해 일본측은 36.1%에 불과하다.

Q2. 한일 경제협력이 왜 중요한가?

A. 첫째 한일협력은 한미동맹, 미일동맹, 나아가 자국의 안보차원에서 중요하다. 한일 양국은 안보측면에서 중국,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양국 모두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중국변수이다. 한

일 양국에게 중국은 중요한 교역국이자 투자상대국이지만, 최근 중국의 경기감속이 예상롭지 않다. 이전처럼 한일 양국이 낙관적인 중국 경제 전망에 기댈 수 없고, 미국의 중국 견제론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에서도 한국시장의 중요성에 대해 재인식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셋째, 일본입장에서 對韓협력 특유의 메리트이다. 일본 쪽에서 보면 2020년 이후 일본의 연평균 GDP 성장률이 명목 0.18%, 실질 0.57%인데, 對韓 무역수지 흑자가 GDP의 0.5%(약 250억 달러)에 달하고 있어 일본측이 얻는 對韓 무역수지 흑자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이다.

Q3. 그렇다면 한일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A. 첫째, 양국 간 상호불신과 경쟁의식이다. 전자는 양국간 정치·외교적 불화가 양국 국민 간 불신감. 한국에서의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유감이고, 후자는 양국 간 경쟁의식이 상대방의 주력제품(예. 한국의 스마트폰, 일본의 자동차)에 대한 경원시(불매), 나아가 농산물 등 민감 분야에서의 상호배척으로 표출되고 있는 점에서 유감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재(수요)는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가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인데, 한·일 간에 소비재 무역이 저조한 것도 양국 간 경쟁의식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둘째, 미중대립에서 시작된 아태지역에서의 자유무역 분위기의 퇴조이다. 물론 한일 양국은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응해야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중일이 자유무역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3)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과 한·일 협력

□ 면담자: 도쿄대학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이가타 아키라(井形明) 교수

Q1.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본의 경쟁력은 어떻게 보고 있고, 첨단기술개발에서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A. 금년 3월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발표한 기술경쟁력 순위를 보면 중국이 44개 항목의 첨단과학기술 가운데 37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한 반면, 일본은 상위 5위에 들어간 항목이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군에는 중국, 미국, 2군에는 영국, 인도, 3군에는 한국, 독일, 호주, 이탈리아, 그리고 4군에 일본이 포함되었다. 충격적인 결과이지만, 경제안전

보장과 미중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과연 일본이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기술자체가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였다. 일본은 기술의 사회실장(상용화)→국제표준화→제품 판매 확대→새로운 기술개발 투자→사회실장(상용화)...이라는 기술개발의 순선환 구조를 만드는데 실패하였고, 첫 단계인 사회실장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한 점이 가장 큰 패착이다.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첫째, 우수한 과학인재의 확보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본에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논문에 등재하는 연구자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에 인색하다. 우수한 과학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는 돈을 벌기 위해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둘째, 대학의 첨단기술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일본의 국립대학은 군사연구를 할 수 없지만, 상기 ASPI의 44개 첨단과학기술은 대부분 군사전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일본 대학들은 이들 군사전용 기술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유지국(like-minded countries)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일본은 2022년부터 ‘경제안전보장중요기술육성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첨단기술(신핵심기술)의 실용화를 노리고 있지만, 선택과 집중 전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 단독이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의 영어권 화이브 아이즈, 나아가 인도, 독일, 한국, 이탈리아 등 민주주의 국가 그룹과 공동 대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Q2. 첨단기술의 보호 관점에서 일본의 전략은 무엇인가?

A. 첨단기술의 유출방지를 통한 경제안보강화 차원에서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의 사례를 본받아 여러 조치를 취하였다.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이 대학을 대상으로 강화하고 있는 간주수출 규제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현재 일본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를 매개한 기술유출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이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 AI, 양자 등 특정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사람(人), 제품(もの), 자본(金), 거기에 사이버보안을 추가하여 FDI를 경유한 우려국(countries of concerns)으로의 기술유출 차단에 나섰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러한 부분과 관련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앞으로 정부가 입법화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 면담자: 아시아대학 쿠노 아라타(久野新) 교수 면담

Q1.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지난 5월 G7 정상회의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공동대응을 명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만이 경제적 강압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중국에 의한 경제적 강압 건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을 경제대상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대만, 티베트, 신장·위구르자치구, 홍콩 등을 대상으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피하기 위해 경제적 강압을 활용하고 있는 점, 세계 각국의 핵심물자의 對中 의존도가 높고 공급망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중국이 악용하고 있는 점 등도 중국을 경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큰 이유이다. 중국이 경제적 강압을 활용하는 특유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국은 정부 보도관이나 국영언론매체가 특정 국가나 기업을 제재대상으로 지목하면 애국적인 소비자와 기업이 불매운동에 나서는 식으로 투명성을 결여한 채 경제적 강압을 행사하고 있다.

Q2.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일본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A. 기업과 정부간 공조체제 구축이 중요하다고 본다. 평소 기업은 기업차원에서 공급망 리스크를 평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당장 중국 정부의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매운동에 직면하는 경우 정부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대응 매뉴얼을 작성·유포하는 것이 최선이라 본다. 정부는 WTO의 다자간 통상질서의 유지, EPA 파트너 국가의 확대, IPEF 활용,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한 핵심물자의 국내 공급망 강화 지원 등이 유효할 것으로 본다.

Q3.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까?

A. 한국은 일본정부가 흔히 사용하는 유지국(like-minded countries)이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양자 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WTO, IPEF 등 다자간 협력 틀을 활용하여 공동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면담자: JCER(일본경제연구센터) 이주인 아쓰시(伊集院敦) 상석연구원

Q1. 미국의 對中 견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한국과 일본은 탈중국화, 디리스킹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A. 미국의 대중 디리스킹 정책이 노골화되고 있지만, 21세기는 냉전시대와는 달리 상호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디커플링은 사실상 실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선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반도체의 경우 한·일·중 모두 원하기 때문에 디리스킹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나 전기차(EV)·배터리에 대해서는 디리스킹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 전기차·배터리의 경우 중국이 배터리 광물부터 채련, 완제품까지 전체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산업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에 대응하여 핵심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동남아국가와 중남미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Q2.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정책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A. 경제안전보장, 공급망강화에 관해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심에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한국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핵심물자의 對中 공급망 단절 리스크 대비에 관심이 높은 반면, 일본은 첨단기술의 유출 방지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본인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RCEP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RCEP의 경우, 5년마다 개정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중국의 경제적 강압 관련하여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본다.

- 끝 -